

2012년 축산정책 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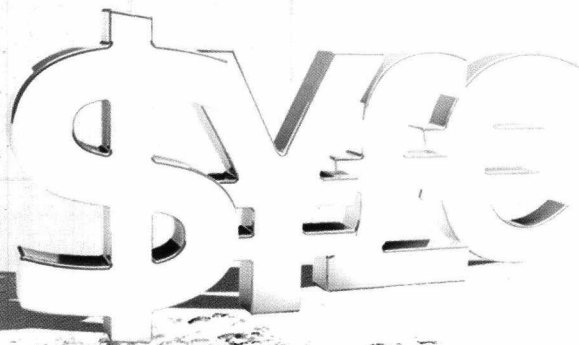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권찬호

1 2011년 축산업 동향 및 정책 평가

2011년은 구제역, FTA 등 외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

첫째, 2011년 4월 마지막 구제역 발생 이후 그 동안 축산이 안고 있는 제 문제를 점점하고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과제를 준비하여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3. 24)과 세부시행방안(5. 6)을 발표하였다.

이에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개정하여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관련 차량등록제 도입근거를 마련하였고, 구제역 SOP 개선(7. 15), 국경검역강화를 위해 소독대상을 축산인(8만 6천 명)에서 축산관계자 등(60만 8천 명)으로 확대(7. 25)하였으며, 지자체 매몰보상금분담(도 10%, 시·군 10%), 방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보상금 감액(20~80%),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등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2012년 적용)하였다.



둘째, 산지 소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만 9천 마리의 저능력 한우암소를 감축시키고 한우고기 할인판매 등 쇠고기 소비를 적극 추진하여 쇠고기 소비량이 2010년에 비해 17.3% 상승(51만 톤)하였다.

공급확대를 통한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냉장 삼겹살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돼지고기 수입량을 확대하고, 후보모돈도 9천 9백 마리 수입하여 모돈 사육마리수 회복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

셋째, FTA 대응 등을 위해 「말산업 육성법」을 9. 10일 제정·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 승마시설, 특구지정 및 장제사 등 자격제도 도입 등 말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신규 가축분뇨 처리시설 116만 톤을 확충하고 액비(液肥) 살포대상지를 농경지에서 골프장·시험림으로 확대(7. 28) 하는 등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을 확충하였다.

축산물 안정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제고 등을 위해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전면 금지(7. 1)시켰으며, 2012년 FTA 관련 예산도 2011년에 비해 37.5% 증액된 13,756억 원을 확보하였다.

2 2012년 주요 추진과제

정부는 한·EU, 한·미 FTA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등 FTA 이행에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2007년 11월 한·미 FTA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10년간(2008~2017) 21.1조원(축산 4. 7)을 지원하고, 2008년 5월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축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하여 9년간(2009~2017) 2.1조 원을 축산분야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한·EU FTA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10년간(2011~2020) 2조 원을 지원하고, 2011년 8월 그간의 여건변화와 농업인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2007년에 수립한 한·미 FTA 대책을 보완한 FTA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21.1조 원 → 22.1)하였으며, 2012년 1월 여·야 합의사항(2011년 10. 30)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 및 10년간 촉발기금 2조원 확충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대책(22.1조 원 → 24.1)을 수립하는 등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그 동안 수립한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저효율·고비용의 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가격경쟁력과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대형 패커를 육성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거점 도축장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등 도축장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화·조직화된 도축·가공·유통기반 등을 확충하겠다.

축산업 허가제는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최초 시행시기(2013년)에 맞춰 세부적인 축산업 허가기준(시설, 위치, 교육기준 등) 및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며,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적용단계 : '13년(기업농) → '14(전업농) → '15(준전업농) → '16(소규모)

친환경 축산업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금년부터 산란계 농장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 운영하고 2013년까지는 농장단위 돼지이력제를 도입하고, 항생제·마약류 등 주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구제역의 경우 농가별로 담당공무원(2만 8천 명) 실명제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항체양성을 모니터링을 통해 미흡농가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관리를 통해 구제역 감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전업농가백신비용 부담 및 방역의무 미준수자에 대해 보상금 차등 지급 등을 통해 농가도 방역에 책임감 갖도록 할 계획이다.

사료비의 경우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격 불안정 시 곧바로 농가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한육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08~2009년간 지원한 농가특별사료구매 자금 상환기간을 1년동안 연장 하였으며, 조사료 생산면적은 2012년까지 330천ha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향후 10년간 유지)하는 한편, 사료업체에 수입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및 세율인하를 추진하였다.

낙농산업의 경우 적정 수급관리를 통해 낙농가와 유업계,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전국단위 수급체제 구축, 단계적 집유 일원화,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낙농산업 선진화 방안을 상반기 중에 수립·추진하겠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관리기간 및 관리지역을 설정하여 유사 시 비상처리대책을 시행하고, 지도·단속 강화, 농가별 지역담당관제 구성·운영 및 가축분뇨 처리지원을 위해 현장출동 컨설팅반 확대·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업은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약 29 조 원, 취업유발효과도 총 98만 여명으로 추정되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축산물생산이라는 1차 산업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축산분야 R&D 효율화, 종축산업 활성화 및 동물약품 수출확대 등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고, 연관산업 육성과 더불어 「말산업 육성법」 시행에 맞춰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대중화 등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보호 강화 등 국민들의 정서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

대다수의 우리 축산인과 관련 종사자들은 지금까지의 열정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축산업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패턴 변화를 수시로 파악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개발·확충하는 등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등록계정**